전남도, 원스톱 스마트관광시대 플랫폼 구축 나서

도내 교통·숙박·식당 등 예약·결제 한 번에 가능 교수·전문가 참여 착수보고회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원스톱 스마트관광을 실현할 전남관광플랫폼(J-TaaS, Jeonnam Travel as a Service) 구축에 나섰다. 모바일 클릭 한 번으로 전남의 모든 관광정보와 교통정보, 숙박시설, 음식점,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통합예약·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17일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 15일 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 관련 교수, 전문가 7명이 함께 소프트웨어(SW), 관광 앱 개발과 관련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남관광플랫폼은 구축할 경우 방문객들이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하며, 가장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전남관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 곳곳에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흩어져 있지만, 국내외 관광객이 이에 대한 정보나 예약·결제, 교통정보 등에 쉽게 접근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전남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은 플랫폼을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 번체) 등의 언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온라인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의 플랫폼을 연동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특장점이 있다. 숙박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식당은 '스마트오더'와 '테이블매니저', 교통은 '코레일'과 '코버스' 등 민간데이터를 연동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선택한 숙박 상품, 승차권, 체험상품, 음식점 등 각각의 가맹점 상품이 별도의 카테고리 장바구니에 담기지만 결제는 플랫폼에서 한번에 진행하도록 설계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유사 사업을 파악하는 등 8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와 보안성 검토를 마치고, 지난 1월 입찰공고(40일)와 제안평가를 통해 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기술협상을 진행한 후 총 34억원에 계약했다.

오는 11월까지 1차 사업 대상지 6개 시·군에 대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1차 사업에는 관광거점인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5개 시와 무안공항이 있는 무안군이 포함된다. 2차 구축사업은 2023년 6월까지 나머지 16개 군에 대한 관광정보와 예약·결제 시스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플랫폼 구축으로 전남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플랫폼을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남형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전남관광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청정·힐링·안심 쉼터, 전남으로 오세요'를 주제로 체류, 힐링,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농산어촌인 안정 정착 전남도, 유통업 입점 성과

바이어 237건 상담 37건 입점

전남도는 농어촌에 이주한 귀농산어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대형 유통업체 입점 품평·상담회를 열어 37건이 입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농어가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귀농산어촌인 생산 농수산물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품평·상담회를 개최했다. 품평·상담회에선 전남지역 41개 귀농산어촌인 가구가 옥수수, 블루베리, 고구마, 반건조생선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농수산물(가공품) 100여 품목을 출품했다.

이날 유통업체에서는 ㈜GS리테일, 농협하나로유통, 와이마트(Y-MART) 등의 30명이 참석했다.

특히 특정 제품에 상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세 농어가가 직접 유통업체 관계자를 방문해 집중 상담하는 '유통업체 컨설팅관'을 운영하고, 우수 귀농산어촌인의 업체를 현장에서 발굴해 2만여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브 '귀농타임'에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대형 유통업체 상담 237건을 진행한 결과 입점 결정 예정 37건, 입점 검토 135건의 실적을 올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귀농산어촌인 증가는 전남 농어촌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큰 활력을 주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형 유통업체로의 판로를 개척해 귀농어인의 소득을 높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민관 태양광 사업 확대

제2순환도로·공공기관 등 추진 공동주택 옥상 등에 보급도

광주시가 민관이 함께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 광주 도시공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협약을 체결하고 제2 순환도로, 공공기관 등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도 2.5㎿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중이다.

주민 참여 사업비가 많으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0.1에서 0.2까지 가산 발급해 수익성이 좋아진다.

광주시는 광주 교통문화연수원과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주차장 등 공공기관, 공유재산, 공동주택 옥상 등에도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시민이 에너지 협동조합에 참여해 태양광에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발전소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광주전자공고에 599㎾ 규모, 진곡산단 주차장에 518㎾ 규모 시민 햇빛발전소가 준공돼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공사비 50% 범위에서 1㎾당 76만8000원 이내로 총 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에는 2020년 말 기준 223㎿ 규모 태양광 시설이 보급됐다"면서 "이들 설비를 통해 6만7000여 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연간 13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세월호 참사 8주기인 지난 1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공산후조리 이용자도 가정방문 조리 서비스

전남도, 18일부터 범위 확대

전남도가 18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비용 감면자에게도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감면받은 산모는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과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유사·중복 사업으로 규정해 1개 사업만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산후조리 기간(평균 30.2일)이 느는 추세를 감안,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그 결과 최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 전에 우선해 전남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남에 사는 취약계층이나 둘째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70%를 감면받아 2주 기준 46만원만 부담하고 이어 가정에서 최대 2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10일 기준 평균 이용 가격은 23만원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출산가정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한 산후조리 서비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 8400명 중 공공산후조리원과 출산가정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자는 4965명으로 전체 출산가정 중 59%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자원봉사 참여자 늘어 지난해 전체 인구 30% 참여

전남지역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등록 자원봉사자 827명과 비영리단체 52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도내 자원봉사 활동 인원은 전체 인구의 30%(56만 10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성별로는 여성이, 지역단위로는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원봉사 참가자들의 활동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3점을 기록했고 참가자의 94.6%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원봉사 활동 장소로는 사회복지기관·시설이 27.7%(35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기관·공익민간단체 24.7%(319명), 보건의료·교육기관 16.5%(212명), 사회적경제조직·재난재해 구호단체 13.8%(178명) 순이다.

자원봉사 활동 내용은 대인서비스 25.9%(365명), 지역사회개발·발전지원활동 12.9%(182명), 교통질서 계도·범죄예방 8.6%(121명) 순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